

“내 땅인데 왜?”…관습도로 통행권 갈등 심화

마을 뒷산 통행·진출입로 방해
고흥 교회 “사람 다니는데 충분”
주민들 “무거운 짐 배달 어려워”
군 “사유재산 사실상 대안 없어”

고흥의 한 농촌마을에서 목사와 마을 주민들 간 진입로 통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도로는 수십여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관습도로인데, 목사가 일부 구간을 개인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유재산권과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대

립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도로는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330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이 마을 뒷산을 오가는 통행로로 오랜 시간 이용해 왔다. 통행로는 천변을 따라 약 40m 길이로 조성돼 있으며, 고흥군은 지난 2021년 학림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해당 도로를 새로 포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 등으로도 불리는 ‘사실상의 도로’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등 민간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 사유지 위 도로의 통행·진출입을 놓고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마을 도로 역시 일부 구간의 토지를 소유하

고 있는 목사 A씨가 장기간 관습적으로 이용된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으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화원과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의 진입 구간 4.5m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해당 도로에 개진 화분을 늘어뜨려 놓고 개인 차량을 주차하는 등 통행을 방해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진입로 일부 구간만 개인 사유지인데 소유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적치한 탓에 나머지 공유지 구간인 도로까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또 도로 안쪽의 단독주택 3채는 우회도로가 없어 해당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차량 진입이

불가해 이웃간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주민 B씨는 “교회 목사라고 한 사람이 양심도 없이 깨진 화분을 도로에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등 진입로를 막아 수 개월간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해놓고 ‘손 대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 ‘지나다니고 싶으면 도로세를 내라’고 했다”며 “가스배달 등 무거운 물건을 주문할 경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배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A씨는 차량 진입은 힘들어도 사람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행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도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웃의 편의를 생각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며

“좁은 마을길에 차량을 후진해서 드나들길래 위험해 보여서 수차례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통행하다가 비싼 수목을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화원을 방문했다가 잠시 차량을 정차한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흥군은 해당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재는 커녕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이 도로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A씨가 매각을 거부, 1년이 넘도록 뚫힌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목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해당 도로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액을 제안했지만 매각을 거부했다”며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며 토지주가 군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군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광주·전남 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 촉구”

평화행동, 총장로서 서명운동

전국적으로 정부의 변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도 강제동원 해법 폐기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광주·전남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하 평화행동) 지난 11일 동구 총장로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서명 운동에 나섰다. 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금 없이 우리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하는 안을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가해자 일본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 떠안는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렵게 싸워 쟁취한 역사적 판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한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제 2의 을사늑약’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결단’이 아닌 일본과 협상 실패 책임을 애꿎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며 “왜 우리 기업들이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지면서 하루아침에 친일 기업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가”라고 역설했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총장로우체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제동원 배상안 폐기 서명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또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 도 ‘끓여 죽인 그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며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제쳐둔 채 다시 한번 놀리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부터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강제동원해법을 폐기하는 거리 서명 운동을 펼쳤다. /민찬기 기자

“광주 국회의원 정치쇼 그만”
5·18단체 “진상규명 협조를”

5·18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을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선거철을 앞두고 ‘5·18 진상규명을 왜곡하는 정치쇼’라고 12일 밝혔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5·18 공법단체가 추진하는 진상규명에 맞서는 행동은 역사를 왜곡하는 불순한 행동이자 매국노의 짓과 같다”며 “진정으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다면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동지회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43년 동안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으로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대국민선언을 발표한 것이다”며 “대립과 갈등, 분란을 유발하는 행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철만 되면 표를 구걸해 온 당사자들이 정작 당선이 된 이후엔 실질적 진상규명에 나선 사실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송갑석, 이병훈, 윤영덕,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과 정의당(강은미), 무소속(양향자, 민형배)의원들은 민주화운동으로 산화하신 열사들과 유가족, 광주시민에게 사죄하라”며 “진상규명을 통한 5·18정신의 계승과 대중정신에 동참한 것이야말로 열사들의 한을 달래줄 유일한 참배이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이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무나) 3층 ▶ 감정이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이 4억 → 최저가 4억
광주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이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상가) ▶ 감정이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오치동 (주택) ▶ 감정이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월산동 (주택) ▶ 감정이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이 4억 → 최저가 4억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댐5분, 광주 20분, (6m도로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상가매매 (상무지구)

- ▶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 시세 - 10억
- ▶ 급매 - 7억 (용4억)

(보3천,월수익 380만)

010-2614-9801

010-6670-9800